

지방자치단체 정보통신 산업 발전방안

(A Study on Industrial Development of Information · Tele-Communication for a local autonomous Entity)

김 주 원* 박 노 국**
(Ju-Won Kim) (Roh-Gook Park)

요 약 산업화에서 크게 뒤져있는 강원도 그 중에서도 원주시가 도시발전방향으로 정보통신분야를 주력 산업으로 하려는 청사진을 마련하려 하고 있다. 도내에서는 산업화 조건이 가장 양호한 원주시가 대규모의 공해산업유치보다는 공해가 없는 첨단 정보통신산업의 유치를 통하여 도시발전을 모색하려는 것은 어쩌면 필연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성숙되면서 지방중심으로 경제활성화의 주요시책들이 거론되는 시점에 이러한 세미나를 개최를 통하여 과연 원주시가 정보통신도시로 거듭 태어나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뜻깊은 일이라 생각된다.

Abstract Wonju, a city of the Kangwon provincial who is lack of industrialization, try to make a blueprint to be a leader of information tele-communication industry as its major direction of city development strategy.

It might be a spontaneous way that Wonju want to have a high hi-technology industry not of anti-environment industry.

In this paper, several alternatives are presented to make Wonju as a hi-technology city in new era of 2nd millennium.

1. 서 론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정보통신기술의 혁신으로 세계가 하나로 통합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적인 과학기술자원의 활용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 일본이 전체적인 경쟁력에서 미국에 훨씬 못 미침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전자 시장을 휩쓸었고, 독일과 프랑스가 우주항공시장을 계속해서 확대해 갈 수 있었던 것은 현재의 생산력을 토대로 미래를 준비하는 합리적인 과학기술정책의 뒷받침이 있었기 때문이다.

국가적 차원에서도 과학기술정책이 미비한 상태에 있고 얼마 전에 논의된 정보화와 관련한 정책을 논의하는 세미나에서도 첨단과학기술분야의 인재양성

에 관한 논의가 심도 있게 논의된 바 있다. 원주시도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정보통신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인재양성과 정보마인드의 확산에 심혈을 기울여야만 정보화에 관한 기반이 미약한 현실을 극복하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정보통신도시 혹은 정보산업에 대한 개념을 우선 규정하고 원주시가 왜 정보통신도시로 발전해야 하는가에 대한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두 번째로는 원주시의 정보통신도시로의 발전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해 원주시의 여건에 대해서 논의하였습니다. 원주시의 발전과정과 제조업체의 현황과 여건을 논의하고 정보통신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논의한다.

세 번째로는 원주시가 정보통신도시로의 발전이 가능하다고 보고 정보통신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정보통신산업의 원주유치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려고 한다. 원주시가 정보

* 강원개발연구원 연구원

** 상지대학교 공학군 산업공학전공

통신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정보통신 산업의 지원체제를 강화하는 방안과 정보통신산업의 지원 수단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지방정부가 독자적으로 특정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데는 여러 가지 제약요인이 있다고 본다. 지방정부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조차도 정보통신 혹은 첨단산업기술의 전략적 육성을 위한 독자적인 계획 접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정보통신(첨단기술)산업의 지방유치 및 육성을 위한 독자적 계획수립의 전례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지역산업진흥관련개별법의 제도적 틀 안에서 기존 산업과 동일하게 시책적용을 받아왔기 때문에 지방에서의 정보통신(첨단기술)산업의 독자적 발전기반이 구축되어 있지도 않는 형편이다.

지방중소도시인 원주시도 이러한 어려움은 마찬가지로 정보통신도시로 원주시만의 독자적인 발전방향을 정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강원도와 중앙정부의 업무상 협력 혹은 인근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등을 통해서 원주시가 의도하는 도시발전의 방향은 정립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춘천시가 우리 원주시보다 지역경제를 발전시킬 여건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민선시대 개막 2주년을 맞아 중앙의 연구기관 등이 전국주요지방도시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평가에서 인구규모나 경제력 등에서 앞선 도시들을 제치고 전국에서 제일 살기 좋은 도시로 선정되었다. 그 선정이유는 수도권상수원지역이라는 발전제약요인을 극복하기 위해 환경친화적인 발전전략을 수립, 춘천을 멀티미디어 전진기지 및 애니메이션타운으로 발전시키려는 노력들이 다른 도시들에 비해 크게 돋보였다는 것이 선정이유이다.

특히 지역경제발전의 전제가 되는 우수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 기술개발지원 임대료 감면 등 각종 인센티브를 도입한 것이나 지역대학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 지역인재들을 싱크탱크로 활용하는 것 등은 다른 도시에서는 볼 수 없었던 사안이라는 것이다.

춘천시와 함께 원주시가 이러한 평가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비교의 대상이 될 수는 없는 일이지만 더 솔직하게 말하자면, 안타깝게도 이러한 구체적인 시도를 지난해까지는 못하였다는 것이다.

다음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원주시가 정보통신도시로 발전할 수 있기 위해서 정보통신산업을 어떻게 발전시켜야 하고, 그 타당한 대안으로 정보통신산업의 유치와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정보통신도시 및 산업의 개념을 정립하고, 정보통신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원주시의 역할과 전략, 원주시의 여건 등을 분석하였다.

2. 정보통신도시 및 산업의 개념정립

2.1 정보통신이란

정보(information)란 이용자와 이용조직에게 특별한 목적을 위해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처리된 자료(data)를 의미한다. 정보화란 정보의 가치가 증대되고 그 역할이 중요해지며 정보통신기술을 바탕으로 정보의 생산, 가공, 유통, 저장, 활용 등의 제반활동이 원활해지도록 네트워크화가 진행되는 과정을 말한다. 즉 정보화는 그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는 수단적인 의미를 갖고 있으며 타 영역과의 발전적인 결합을 통해 상승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이 지배적으로 나타나는 사회를 정보화사회(information society)라 하며 정보가 모든 부분에서 지배적인 사회로서 '정보가 다른 어떤 요소보다도 사회적으로 큰 가치를 갖는다는 의미'와 '정보가 사회의 유지·발전을 위한 핵심적인 자원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러한 정보화사회의 특징은 첫째 정보의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중요성이 증대된 사회이다. 둘째 정보의 이용 가치가 높아짐에 따라 정보의 생산과 유통활동이 활성화 되는 사회이다. 셋째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 의한 정보접근이 용이하며 모든 생활수준을 한단계 올릴 수 있는 사회이다. 넷째 정보의 가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은 정보가 권력의 핵심적인 요소로 지배의 도구화가 될 위험성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는 사회이다.

따라서 정보정책은 이러한 정보화사회의 특성들과 관련되고 정보화사회의 중요한 요소를 관리하고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즉 정보정책은 정보화사회의 근간이 되는 정보의 생산과 저장, 유통, 이용 등이 정당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적, 물적, 제도적인 제반여건을 조성하는 것과 관련된 정책을 말한다. 정보화사회의 실현은 정보통신의 발달과 더불어서 실현되므로 21세기에는 정보통신의 발달수준에 따라 국가경쟁력의 지표가 결정될 것이다.

2.2 정보통신산업

컴퓨터, 광전송, 무선기술, 영상압축기술 및 소프트웨어 등의 기술발전으로 기존의 서비스가 발전 융합되어 이용

자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가 창출되고 있다. 기존의 서비스가 음성전화서비스, 무선호출서비스, TRS, CATV 등이었다고 하면, 새로운 서비스 형태로 화상전화, 화상회의 주문형 정보제공서비스,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 원격교육, 쌍방향 CATV, 홈쇼핑, 홈뱅킹 등이 예가 될 수 있다. 정보통신산업은 가전기기, 컴퓨터, 통신, 방송, 영상, 오락 등 서로 다른 산업들이 융합되어 고도의 기술과 지식 집약적인 멀티미디어산업으로 새롭게 정의될 수 있다. 정보통신산업은 급속한 기술발전으로 정의 디지털화와 서비스의 광대역화를 통하여 신정보사회를 향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미래의 신정보 사회는 디지털기술이 기반이 되는 사이버 경제, 사이버 공동체사회로 발전될 것이다. 사이버경제는 화상회의과를 이용하여 프로젝트 중심의 기업활동과 홈뱅킹, 홈쇼핑 등의 전자거래등이 이루어질 것이며, 사이버 커뮤니티는 양방향TV를 이용하여 의료, 교육, 오락, 각종정보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아 생활환경이 개선되게 될 것이다. 정보통신산업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가진 인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통하여 막대한 부가가치와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산업이다. 제품개발주기와 산업수명주기가 매우 빠르고, 세계적인 기술표준화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들이 끊임없이 개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산업은 소규모의 신생기업들이 계속 나타나는 매우 역동적인 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정보통신시장의 규모도 기업의 기술개발경쟁에 따른 기술주도와 이용자의 욕구증대에 따른 수요견인의 상호작용으로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 정보통신산업에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관련산업들이 포함되는데 구체적으로는 영상, 게임, 출판 등의 내용물 산업, 다시 이를 정보매체로 가공하는 정보처리산업, 이를 전달하는 네트워크산업, 서비스제공을 위한 시스템통합산업 및 이를 지원하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산업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정보통신산업에서의 부가가치 비중은 기기나 통신망 등의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 서비스 및 내용물 중심으로 급속히 전환되고 있다.

2.3 정보통신도시 육성의 필요성

인터넷과 위성방송 등으로 안방에 앉아서 전세계와 상거래가 가능한 시대에 전통적인 시대적 사고의 의미는 퇴색되고 있다. 우리 나라의 현재 산업구조는 기업들이 생산하는 부가가치중 70%는 인건비로 나머지 30%는 세금과 금융부담충당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재투자 자원은 거의 불가능하다.

국내의 한 중소기업이 일본의 아마다그룹과 소프트웨어 수출계약으로 대기업이 리비아 대수로 공사를 수주한 금액과 맞먹는 액수의 수출효과를 얻은 것은 신선한 충격이며 미래의 산업방향을 예고하고 있다. 채산성이 맞지 않는 중소기업들에게 고도의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정보통신산업은 이러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최적의 분야라고 판단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의 여건을 이용하여 초고속정보통신망을 구축하고 그에 따른 주변환경(금융, 용지, 인력, 용수, 전기 등 정보통신 간접자본시설)을 조화시켜준다면 민간기업들은 이를 이용하여 사업기회를 포착하고 추진할 것이며 이로 인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지역정보화의 조기실현으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등 그 파급효과는 클 것이다.

정보통신기능과 새로운 통신서비스가 완비된 도시를 구축함으로써, 첫째 지역경제 활성화에 따른 중요한 전략적 자원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로 인한 자치단체의 지방재원이 늘어나고 기업의 간접투자 등으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다. 둘째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직접적으로 고도의 정보 시스템을 활용하여 생활수준을 한 차원 높여 보다 안락하고 윤택한 삶을 영위하게 될 것이다. 간접적으로 지역 내에 정보통신도시가 완비됨으로서 이를 필요로 하는 기업, 연구, 유통, 정보, 통신관련 산업들이 유치됨으로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이에 따라 문화적, 사회적 활동 등이 활발해질 것이다. 셋째 지역주민에 대한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지역행정의 전산화,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신속하고 정확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주민들의 지역에 대한 자긍심과 애郷심이 고취되어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모든 사업에 민음이 생겨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넷째 지역내의 고용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자기사업에 전력할 수 있는 '오너기업가'가 많아지고 이들의 기술이 모여 커다란 역량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다섯째 공해문제를 생각할 필요가 없는 청정산업도시를 육성할 수 있다. 또한 부존자원이 필요 없는 두뇌집약산업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여섯째 수도권인구분산효과, 수도권으로 경제집중의 분산효과가 발생한다. 정보통신 산업만을 보더라도 산업(S/W, H/W, 서비스)의 80%가 서울을 중심으로 집중되어 있다. 원주는 수도권으로부터 거리로 120KM(이동거리 1시간)밖에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원주를 중심으로 한 정보통신도시육성이 활성화되어 이에 따른 산업이 육성된다면 수도권인구분산 및 경제분산효과가 발생한다. 이에 따른 원주권인구유입으로 인한 세수증대가 기대될 것이다.

지역개발, 지역발전을 통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균형 발전된 정보사회의 실현이라는 상위목적에 종속되는 정책적 수단으로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정보화의 유효성을 인식하고 지방자치단체간의 차별성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993년부터 본격적으로 지방화와 정보화의 물결을 동시에 맞고있는 원주지역은 이 두 조류를 어떻게 관리하고 조화롭게 순용해 나가느냐에 따라 21세기 경쟁력 있고 꿈이 있고 자원이 살아있는 모델도시로 성장, 발전되는 것이 결정될 것이다. 따라서 21세기를 얼마 남기지 않은 현실점에서 가장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원주를 육성하는 것은 이 지역에 살고있는 모든 주민의 공통된 뜻이다. 국가정책방향, 주민의 뜻, 세계적인 경제조류 등을 분석해볼 때 정보통신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정보통신산업은 비효율적인 인력과 조직을 재편함으로써 경제전반의 고효율구조 구축에 기여한다. 산업사회에서는 경. 중공업이, 정보사회에서는 정보통신, S/W 등 지식산업이 국가경제발전을 선도한다. 정보통신 산업 발전은 당해기업의 성장 못지 않게 타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중요하며, 민간기업경영은 물론 국가 공공행정에 이르기까지 리스트럭처링을 촉진하는 기능이 있다. 개도국에 비해 기술우위를 확보하였고 우수한 인적자원이 풍부한 우리 나라가 선진국에 도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지만 정보통신 관련 산업 육성에 소홀히 한다면 21세기 경쟁력 회복불능국가가 될 수도 있다.

3. 원주시의 정보통신산업발전 가능성과 여건

3.1 원주시의 발전과정

현재 우리의 발전은 경제개발계획과 더불어 불가피하게 선택된 불균형개발전략의 결과이다. 이 전략은 결과적으로 서울과 부산을 중심으로 하는 경부 축에 대한 집중투자로 국토공간상의 양극화현상을 초래하게 되었다.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인구는 95년말 기준으로 전국 대비 45.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사업체 수도 55%로 절반을 넘어서고 있어 지방과의 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지역 공간적 차원에서 보면, 서울의 발전이었으며 급기야 “서울민국이나 대한민국이나?”하는 의문을 불러일으키게 되었다.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수도권의 대도시화는 지금까지 무서운 속도로 가속화되어 왔으며

이로 인한 도시와 농촌, 서울과 지방,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다. 결국 이러한 사실은 지역간 위화감을 조장할 단계에 이르렀다. 지방의 중·소도시들은 경제정책의 이방지대로 소외당한 채, 지난 30여년간 정체일로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대도시를 향한 지방인구의 유출은 중단 없이 계속되어 왔고, 지방인구의 유출은 양적인 경제성장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 편익이 비용보다 더 크다는 경제정책수립자들의 편견 속에 지방중소도시의 정체는 당연한 현상으로 여겨졌다.

대도시권에서의 급격한 인구증가는 농촌의 황폐화와 지방도시의 정체를 상대적으로 유발시켰음은 물론 지역간 격차를 심화시켜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의 문제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제기되고 그 해결을 급격히 요구하게 되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중소도시들이 경험하고 있는 사실이지만 지방자치체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면서 지역발전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증폭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일반적으로 인구의 도시집중도는 산업화 정도와 근대화의 정도를 표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인구의 규모와 소득수준과는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음에 틀림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인구의 이동은 흐르는 물과 같아서 소득원이 낮은 곳에서 소득원이 높은 곳으로 인구가 유입하게 마련인 때문이다.

3.2 원주시의 제조업체 현황과 여건

산업화라는 명제하에서 개발의 효율성을 우선적으로 추진한 결과로 국토의 불균형개발이 심화되어 주택난, 교통난, 고지가, 농촌인력의 부족, 휴경지의 발생 등 국토자원의 불균형에 따른 부정적인 면이 나타나게 되었다.

산업부문중 제조업체와 관련된 불균형을 살펴보면, 전국 제조업체의 분포 및 생산활동이 수도권과 영남권에 편중되어 있다. 1995년 현재 수도권의 비중은 우리 나라 전체 사업체수의 55.2%, 고용의 46.4%, 생산의 41.4%를 차지하고 있으며, 영남권은 각각 29.6%, 35.4%, 38.3%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 편중비율은 90년대 들어 약간 줄어들기는 했지만 70년대나 80년대에 비해 큰 변동 없이 유지되어 왔다.

결국 이 두지역이 우리 나라 전체 사업체수의 84.8%, 고용의 81.8%, 생산의 79.7%를 차지하고 있어 두지역에 의한 지역적 불균형 상태가 심각함을 알 수 있다. 이두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국토의 56%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5%내외의 사업체만이 입지하고 있어 지

역간의 격차가 심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강원도의 전국대비 제조업체수는 1970년대 4.3%에서 1995년 현재 1.6%에 불과하며, 종업원수로는 1970년 2.2%에서 1995년 기준 1.7%에 불과하다. 생산측면에서는 1970년 1.5%에서 1995년 1.4%에 불과한 실정이다. 강원도 지역이 경제발전이 급속도로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철저히 소외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좀더 도내 지역에 대한 종업원수와 업체 수를 원주시의 도내에서의 위상을 파악하기 위해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앞에서 논의된 전국대비 강원도의 산업에 대한 분석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산업화과정에서 강원도가 철저히 소외되었음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좀더 솔직하게 말하자면, 강원도는 임야가 83%에 이르는 산악지역이라는 입지상의 한계에서도 그 원인을 찾아야 할 것이다. 강원도 전체적으로는 도내에서 원주가 종업원수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3%에 이른다. 이 비중은 춘천과 강릉을 합한 26.7%보다도 높은 수치이다.

그러한 한계를 논의하는 것이 타당할지 모르나 원주시의 경우는 입지상의 여건이 도내 다른 지역과 비교할 때 절대적 우위에 있고 중부권도시인 청주나 대전 등과 비교하여 손색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소외되어왔다는

점에서 원주시의 산업발전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표 2>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원주시의 경우에는 업종별로 차별을 나타내지 않고 다양각색의 업종들이 고르게 발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긍정적인 면에서 해석을 한다면, 입지면에서 원주시는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단점으로는 지역산업의 특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부가가치가 높은 조립 금속 기계장비와 자동차관련산업 그리고 전기 전자 통신관련산업의 비중이 43.9%로 나타나는 것은 원주시가 이제 산업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나가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

3.3 원주시의 정보통신산업으로의 발전가능성

원주시가 정보통신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해결하여야 할 난관이 한 두가지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원주시의 발전방향을 정보통신도시로 하게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하여 원주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반대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이미 정보통신도시에 대한 논의가 있기 이전의 각종 설문조사에서도 원주시민들이 정보통신도시로의

<표 1> 도내 중요도시의 종업원 규모별 현황

지역별 구분	강원도	원주시	춘천시	강릉시	동해시	횡성군	기타시군
업체수	4,770	924	686	738	301	173	1,948
종업원수	49,063	14,851	4,825	8,303	3,626	2,953	14,151
비율	100	30.3	9.8	16.9	7.4	6	28.8

[출처: 강원도, 1996년 제조업체 현황, 1997.3.]

<표 2> 원주시의 제조업체 업종별 현황

구분	총계	음식료·담배	섬유·가죽·의복	목재·가구	종이·인쇄·출판	화학·고무·PVC	비금속·광물·레미콘	1차·금속	조립·금속·기계·장비	자동차·및·운송부품	전기·전자·통신	기타
업체수	924	254	161	65	46	53	77	2	151	10	41	64
종업원수	14,851	3,477	689	403	533	1,168	1,419	31	2,462	2,164	1,882	623
비율	100	23.4	4.6	2.7	3.6	7.8	9.5	0.2	16.6	14.6	12.7	4.1

[출처: 강원도, 1996년 제조업체 현황, 1997.3.]

발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

정보통신산업이 21세기 정보혁명시대에 가장 각광을 받게 될 산업이라는 점과 강원도의 청정이미지를 훼손시키지 않고 지역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민들이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컴퓨터 정보통신의 눈부신 기술발전은 하루가 멀다하고 새로운 서비스들을 선보이며 정보혁명이라는 거대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정보통신산업은 “빅뱅”이라는 말이 따라다닐 정도로 수요가 폭발적인 분야이다. 시장성장률에서 지구촌전산업은 연평균 5%, 정보통신분야는 10%, 한국의 정보통신시장 성장세는 그 2배인 20%이다.

특히 이산산업이 원주지역에 적합한 이유는 중소기업을 육성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정보통신은 창의력 의존산업이어서 관료적인 거대기업에는 적합하지 않다. 미국의 정보통신기업들은 5~10년내 .창업된 중소기업규모의 벤처기업들이다. 현재 원주에서는 중소기업관리공단에서 중소기업전용공단을 조성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하여 건설한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보통신산업이 중소기업에 적합한 산업이라면 중소기업전용공단을 이용하여 정보통신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려야 할 것이다.

강원도 제조업체 현황에 따르면, 원주시의 전기·전자·통신분야의 비중은 12.7%에 이르며 업체수도 41개 업체에 이른다. 이외에도 소프트웨어관련 업체가 갑우시스템을 비롯하여 3개업체가 있다. 아직 가시화되고 있는 것이 없어 언급하는 것이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한솔과학산업단지가 총투자비 332억, 계획면적 24만 2천여평에 이르는 대규모의 정보통신산업단지를 조성할 예정이어서 원주가 정보통신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밝게 하고 있다.

원주지역에 위치한 정보통신산업과 관련되는 연구소와 대학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정보통신과 관련되는 유관 기관으로는 강원체신청, 한국통신강원사업본부, 강원 이동통신, 원주지역정보센터, 원주CATV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기관 중에서 한국통신은 한국통신연수원을 행구동에 건립하면서 원주의 정보통신도시로의 발전을 더욱 촉진시키고 있으며, 원주지역정보센터에서도 원주텔이라는 원주지역DB구축망을 설정하여 지역정보의 효율적인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원주시가 정보통신도시로 발전방향을 설정하여 지역유관단체들과 노력한다면 정보통신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인력면에서는 커다란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정보통신산업이 고도의 창의력과 전문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정보통신산업발전에 브레인 역할을 할 수 있

는 대학교수급의 연구원을 어떻게 확보하고 유치할 것인가는 원주시가 정보통신도시로 발전하는데 당연한 가장 커다란 과제라고 볼 수 있다.

4. 결론

정보통신산업이 타산업에 보탬이 되는 상승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원주시가 거듭 태어나기 위해서는 정말 바람직한 산업임에 틀림없다. 더군다나 대기오염물질을 거의 배출하지 않는 환경친화산업이라는 점과 품질은 향상되면서 가격은 낮아지는 업종으로서 경제성장을 주도하는 업종이기도 하다. 또한 일자리 창출로 강원도 인구유입에도 기여하여 도세를 확장할 기회도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이 많기 때문에 또한 많은 자치단체들이 정보통신산업(첨단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도내에서만도 춘천의 멀티미디어산업육성과 대치되는 측면이 있으며, 아직 결정은 되지 않았지만 테크노 파크를 유치하기위해 강릉, 춘천, 원주가 경쟁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난관을 어떻게 원주시가 잘 극복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냐는 숙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지역간의 개발과 발전에 대한 갈등을 극복하는 방안으로 21세기의 국토개발계획의 방법이 단일도시의 성장거점이 아니라 광역거점방식이라는 점에서 도내 도시지역간의 네트워크화가 필요하다. 이미 광역권 개발방식은 3차국토개발계획에서 일부 시행되고 있으며, 4차국토개발에서는 이러한 개발방식이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정보통신산업의 발전방향도 원주시만이 아니라 춘천과 강릉을 연계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논의된 정보통신산업의 유치를 통하여 원주시가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정보통신도시 육성으로 인한 멀티미디어, 통신사업(하드웨어산업, 소프트웨어 산업, 통신서비스 산업)과 관련된 연구원, 교수요원 및 고급인력을 유치할 수 있다. 다양한 지역주민들에게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된다. 산업체와 교육기관이 운영하는 산학 협동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교육 및 연구 프로그램에 의한 실무형/이론적 고급두뇌를 배출 할 수 있으며 지역에서 배출된 인력을 자체 흡수 할 수 있다. 둘째, 정보화는 기업경쟁력제고 및 국가 발전전략의 핵심 생산요소시장과 유통시장의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시킴으로서 비용구조를 개선하고 경제효율을 극대화 시킨다. 구인, 구직정보시스템 등 인력정보화, OA, 공장자동화 등으로 노동시장의 경쟁을 촉진시키고 생산성향상 및 임금비용의 절감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신속, 정확하게 시장수요를 파악, 분석하고 적기에 적량을 생산

함으로서 자원활용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국제경쟁환경에 신속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셋째, 경제전반의 고용구조 재편을 통해 노동력 부족문제를 해소할 수 있으며 창의적이고 아이디어가 많은 젊은 세대에 신규고용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타지역으로 유출되거나 타지역에서 교육받은 인력을 지역 내 정보통신 산업에 흡수함으로써 고용증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지역내의 고용확대를 통해 원주 지역주민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기울 수 있다. 세수증대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연고를 갖는 스포츠를 육성함으로써 원주지역을 홍보하고 이로 인한 정보통신 산업/서비스를 육성하는 피드백 생산구조를 활성화할 수 있다.

넷째, 정보통신 관련산업이 활성화됨으로서 하드웨어적, 소프트웨어적, 정보서비스관련산업이 활성화된다. 우리경제의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극복할 수 있음으로 민간기업 경영은 물론 국가 공공행정기능에 이르기까지 리스 전략처리를 촉진할 수 있다. 정보통신 산업은 두뇌산업, 첨단기술집약산업 벤처기업 성격의 중소기업이 발전을 주도하여 경제의 구조적 개선에 기여할 것이다. 다섯째, 원격교육 등 교육정보화의 실현으로 지역간 교육격차를 완화할 뿐 아니라 해외의 고급교육내용(contents)에 대한 보편적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멀티미디어 교육을 활성화함으로써 과도한 사교육비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95년 자료에 의하면 년 사교육비는 17조 4천 640억원(GNP 대비 5.8 % 이다)으로 이러한 교육관련 콘텐츠 사업의 발전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

따라서 정보통신 도시로서의 기능이 완비된 상태에서 교육소프트웨어 산업의 육성으로 인한 수도권 인구의 원주 유입 즉 원주에 직장을 둔 인력들은 자녀교육으로 인한 수도권 거주를 더 이상 고집하지 않음으로서 자연스럽게 수도권 인구의 지방 분산이 이루어 질 것이다. 산업화 과정에서 누적된 문제해결을 할 수 있다. 원격진료 시스템에 의한 의료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환경정보서비스 시스템을 통해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으며 지역단위 정보센타를 통한 생활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다. 정보화는 최소의 비용으로 교육, 문화기반의 확충,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지역, 계층간 격차를 완화하는 동시에 지자체의 경쟁력을 살리고 미래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을 기약하는 기본요소가 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모든 지자체가 정보화가 21세기 지자체 발전의 관건이라는 인식아래 정보인프라 확충 및 정보통신 산업육성 등 정보통신발전전략을 수립,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21세기 정보화시대가 불과 3년 앞을 다가온 지금 원주시가 새로운 세기의 중심에 설 수 있는냐를 평가름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세계적 무한경쟁 시대에는 기술적 우위를 가진 일류기업만이 살아남을 수 있고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기업은 도태되며 정보화는 기존 경영시스템의 전면적인 구조개편을 수반하게 되는데

이는 지자체들 사이에도 같은 논리가 적용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것은 자치단체 혼자 힘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민, 지역 정보통신 관련기관, 대학, 기업 모두의 의지와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참 고 문 헌

- [1] 강원개발연구원, 민자유치 활성화 방안연구, 1997. 6.
- [2] 강원도, 1996년 제조업체현황, 1997.
- [3] 강원도, 강원도 지역경제활성화를위한 지원체제 강화 방안, 1996.
- [4] 국토개발연구원, 지역간 기업활동여건 및 입지비용 비교분석에 관한 연구, 1992.
- [5] 김선기, 지방경제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유치방안 (서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3).
- [6] 김용웅, "21세기 지역개발정책의 새로운 접근," 지역균형발전정책의 평가와 발전방향 세미나(국토개발연구원·강원개발연구원공동세미나), 1997.6.25
- [7] 박철환, 강원지역 산업부문별 정보화 촉진방안에 관한 연구, 1993.
- [8] 박희정,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체제 강화방안(서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4).

박 노 국



인하대학교에서 학사, 석사, 박사학위 취득.

91년 9월 상지대학교 산업공학과 부임

96년 3월~현재 상지대학교 생산기술 연구소 소장 역임

관심분야 : 품질경영,공정합리화를 이용한 공장혁신 및 ISO 9000 등